

2022 독일 안정화프로그램

(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2)

2022. 7.

연구진

- 김우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
- 박지혜 선임연구원

1. 2021년 경제 및 재정 상황

□ (경제) 2021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.9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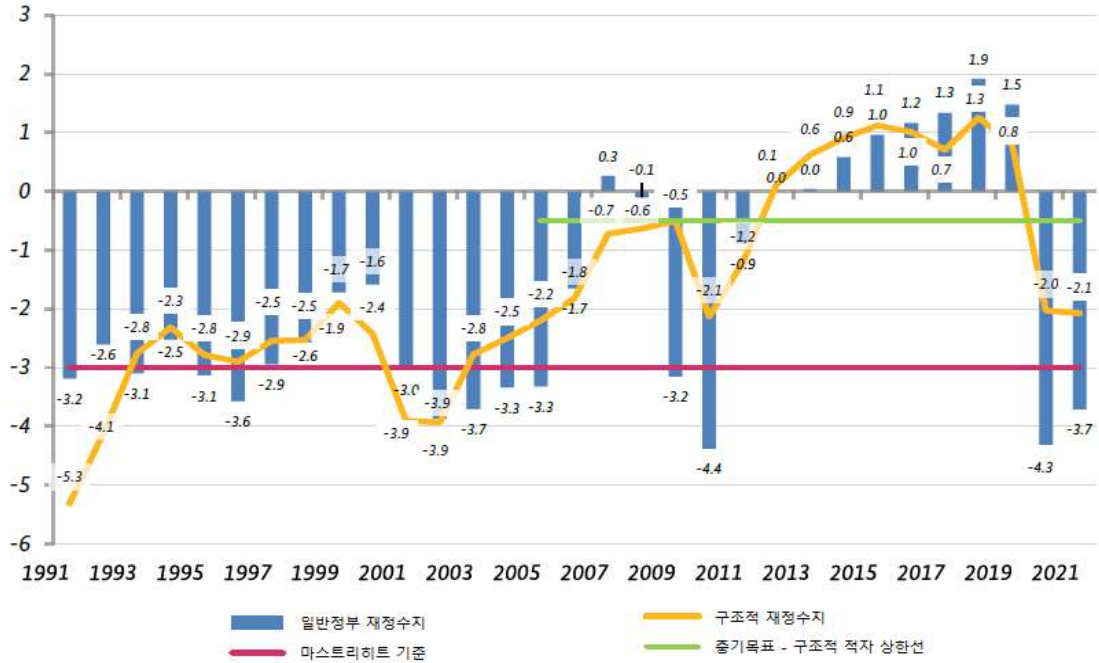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발병률 감소로 인하여 2,3분기 동안 눈에 띄는 경제 회복이 있었으나 4분기에는 4차 감염의 유행과 봉쇄로 인하여 다시 한 번 경기 회복이 둔화되었음

□ (재정) 2021년 독일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8.9%로 크게 증가하였고, 총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에 필요한 조치들로 인하여 7.4% 증가함

- 총수입의 증가세는 세입이 12.9%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고, 사회보장기여금도 4.1%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음
- GDP 대비 총수입도 2020년 46.5%에서 2021년 47.8%로 크게 증가함
 - 이 경우에도 세입 증가율이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2020년 23%에서 2021년 24.4%로 급격하게 증가함
- 명목 GDP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GDP 대비 총지출은 51.5%로 증가했으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출의 비율이 50%를 넘음
- 2021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GDP의 -3.7%를 기록하였고, 2020년 이후 연속하여 마스트리히트 재정적자 상한선¹⁾을 두 번 초과
 - 2021년 4월에 GDP 대비 9% 적자를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세수가 훨씬 양호했으며, 코로나19 대비 추가 예산이 적게 지출되어 적자 수준이 낮게 나타남
-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0년 68.7%에서 2021년 69.3%로 소폭 증가했고, 여전히 상한선인 60%를 초과함
 -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9년 말 58.9%였으며, 이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마스트리히트 기준치인 60%를 밑도는 수치였음

1)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따르면 회원국은 GDP 대비 재정적자 3%, GDP 대비 국가채무 60% 이하를 유지해야 함

[그림 1]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구조적 재정수지 추이(1991~2021)



출처: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, Abbildung 3, p.18, 2022.4.2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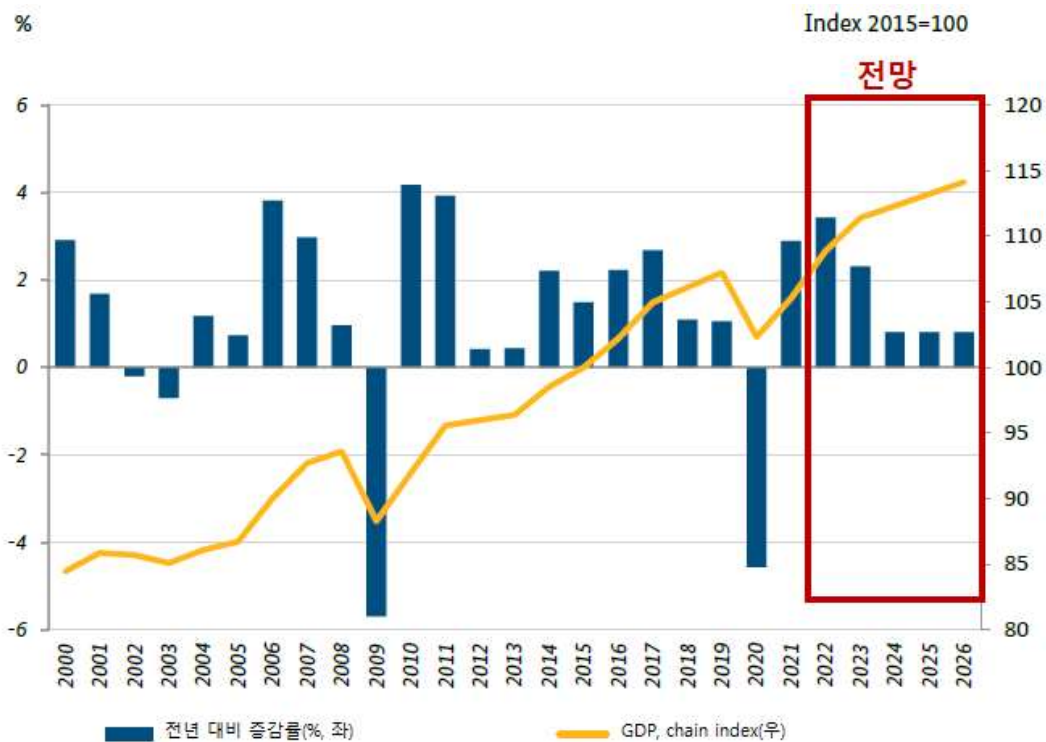
2. 경제 전망

□ (단기 전망) 연방 정부는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을 3.6%로 전망

-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어 가면서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
 - 2022년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6.0% 증가하여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, 정부소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
 -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어 가면서 투자가 늘어 총고정자본형성도 전년대비 2.6% 증가하고, 전 세계적인 경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5.5%, 수입 6.3%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노동시장은 회복세가 지속되어 실업률이 5.7%에서 5.1%로 크게 떨어질 것
 - 취업자 수는 42만5,000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4,5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

- 그러나 2022년 안정화프로그램이 작성된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, 독일 경제에 직·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함
 - 2022년 물가상승률을 3.3%로 가정했으나, 지정학적 위협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여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
- (중기 전망) 2023년 경제성장률은 2.3%로 전망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0.8%로 가정
 -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 - 향후 생산성의 향상은 숙련된 노동자의 이민, 여성 및 노년층의 노동 참여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

[그림 2] 실질GDP 추이 및 전망



출처: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, Abbildung 1, p.14, 2022.4.27.

<표 2> 2021-2026년 독일 경제 전망

(단위: %)

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실질GDP성장률	2.9	3.6	2.3	0.8	0.8	0.8
민간소비	0.1	6.0	2.6	0.8	0.8	0.8
정부소비	3.1	0.0	-0.2	0.1	0.1	0.1
총고정자본형성	1.5	2.6	4.3	2.1	2.1	2.1
수출	9.9	5.5	4.0	3.1	3.1	3.1
수입	9.3	6.3	4.3	3.5	3.5	3.5

자료: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, Tabelle 11. 주요 변수 발췌, p.54, 2022.4.27.

3. 재정 전망

- (수입 및 지출) GDP 대비 총수입은 2022년 45.5%, GDP 대비 총지출은 2022년 49.25%로 전망됨
 - (수입) 총수입은 2022년에 GDP 대비 45.5%까지 하락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에는 47.25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 - 세입은 2022년 GDP의 23%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24.25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 - 사회보장기여금도 2022년 17.25%로 하락한 뒤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6년에는 18.25%에 이를 것으로 전망
 - (지출) 2022년에는 지출이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약 2% 증가할 것이고, GDP 대비 정부지출은 49.25%로 감소할 것임
 - 2023년에는 중간 소비와 보조금의 정상화로 인하여 다시 지출 증가율이 1.25%로 낮아질 것이며, 전망기간 동안 정부지출의 비율은 GDP 대비 47.75%로 안정화 될 것임

<표 2> 2021-2026년 독일 수입 및 지출 비중 전망

(단위: GDP 대비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
세입 (A)	24.2	23.0	23.5	23.75	24	24.25
사회보장기여금 (B)	17.7	17.25	17.5	17.5	18	18.25
세입및사회보장기여금 (A+B)	42.2	40.25	41	41.25	41.25	42.5
총수입	47.8	45.5	46	46.25	47	47.25
총지출	51.5	49.25	47.75	48.0	47.75	47.75

자료: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, Tabelle 1,2., 2022.4.27.

- (재정수지) 2022년에 GDP의 3.75%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2023년에는 GDP의 2%의 재정적자를 전망함
 - 2026년까지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GDP 대비 1~2% 수준으로 줄어나갈 계획
- (구조적 재정수지) 2021년 구조적재정수지는 GDP의 -2.1%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구조적재정적자가 3.5%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구조적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2026년에는 GDP의 0.5%를 넘지 않는 중기 목표를 달성할 계획
- (지출기준) 2022년 재정지출은 3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명목 GDP 성장률과 거의 비슷함
 - 2023년에 지출은 0.25% 증가하며 전망 기간 동안 명목 GDP의 성장률보다 느리게 증가할 것임
- (채무)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6.75%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이는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신규차입 수준이 감소했고, 또한 GDP 성장률이 높아져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4.5%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

<표 3> 2021~2026 독일 재정 전망

(단위: GDP 대비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
일반정부 재정수지	-3.7	-3.75	-2	-1.75	-	-0.5
연방정부	-4.0	-3	-1.5	1.5	-	-
주정부	0.1	-0.25	0	0	0.25	0.25
지방자치단체	0	0	0	0	0	0.25
사회보장기금	0.1	-0.25	-0.5	-0.5	-0.25	-0.25
이자지출	0.6	0.5	0.5	0.5	0.5	0.5
기초재정수지	-3.1	-3.25	-1.5	-1.25	-0.25	0
구조적 재정수지	-2.1	-3.5	-2.25	-2	-	-0.5

자료: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, Tabelle 6,15. 주요 변수 발췌, p.57, 2022.4.27.

<표 4> 2021~2026 독일 채무 전망(마스트리히트 기준)

(단위: GDP 대비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
총채무	69.3	66.75	65.75	65.75	65	64.5
채무 비율 변화	0.6	-2.5	-	-0.25	-0.75	-0.5

자료: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, Tabelle 19, p.61, 2022.4.27.

4. 재정 정책 방향

- (재정정책 방향)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설정
 - 지난 3년간 부채 수준이 예외적으로 높았으나 향후 중기 전망 기간 동안은 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노력
 - 독일 경제의 부흥, 기후 친화적 성장,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투자
- (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정화 대책)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·단기적 지원 정책을 사용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일자리를 지키고자 함

-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2021년 말까지 경제적 지원, 특별 보조금, 경기부양책에만 총 3,780억유로의 예산을 지원
 - 2020년과 2021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단축근로수당 혜택 247억유로,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보상 176억유로를 포함하여 총 423억유로를 지원함
 - 2022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합의함
- 500억유로 규모의 미래개발패키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, 이 중 상당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됨
- 독일 회복 및 복구계획(DARP; Deutscher Aufbau-und Resilienzplan)은 유럽연합의 경제 회복 및 복구지원 프로그램(RRF2)로부터 256억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아 약 279억유로를 지출할 계획
 - 기후정책과 에너지전환(113억유로), 경제 및 인프라의 디지털화(59억유로), 교육의 디지털화(14억유로), 사회결속강화(13억유로), 팬데믹 대응 보건시스템강화(46억유로), 공공행정 현대화 및 투자장벽 완화(35억유로) 등
- (공공투자) 2022년의 투자지출에 사용할 연방 예산은 508억유로이고, 2026년까지 매년 약 510억유로를 지출할 전망
 -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연 100억유로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, 도로·철도 및 수상 운송, 교육 및 연구, 디지털 인프라 및 경제, 주택 및 교통수단의 기후친화적 전환에 사용할 계획
- (기후변화 대응) 연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,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포괄적인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채택함
 -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(Klimaschutz-Sofortprogramm 2022)은 총 800억유로 이

2)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: 유럽연합 경제회복기금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회원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고 위기의 경제·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며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. 총 규모는 보조금 3,125억유로와 대출 3,600억유로로 총 6725억유로.

상의 기후 친화적인 공공 지출을 포함하고 있음

- 국가 탈탄소 프로그램에 2023년까지 약 35억유로 지원, EEG 추가금 인하 (2022년 7월부터 완전 폐지로 수정), 철도 운송 시스템에 2030년까지 620억유로 투자, 기후친화적 사회주택 건설 등에 지원

□ (노동시장)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까지 인상

- 미니잡의 최저소득 한도를 주당 10시간에 520유로로 상향하고, 미디잡의 최저소득 한도 역시 1,600유로로 상향함³⁾

□ (교육 및 연구) 코로나19 이후 교육 불평등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억유로의 따라잡기 프로그램(catch-up program)을 지원하고, 학교의 디지털 학습 인프라 투자에 15억유로를 추가하여 총 65억유로 투자할 계획

- 고등교육기관의 강화를 위하여 연방 및 주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약38억유로, 2024년부터 약 41억유로를 지원

□ (가족 및 사회보장) 연방정부는 가족정책, 교육, 사회보장과 같은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자 함

- 2021년까지 총 54억유로의 기금을 통하여 아동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촉진하고, 좋은보육시설법(Gute-KiTa-Gesetz)을 위해 2022년 말까지 주정부에 55억유로를 지원

- 초등학교 아동에게 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특별 기금을 통하여 주정부에 최대 35억유로의 재정을 지원

□ (보건)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에 직면한 의료보험기금에 일회성 보조금 140억유로를 추가 지원하여 2022년에는 총 285억유로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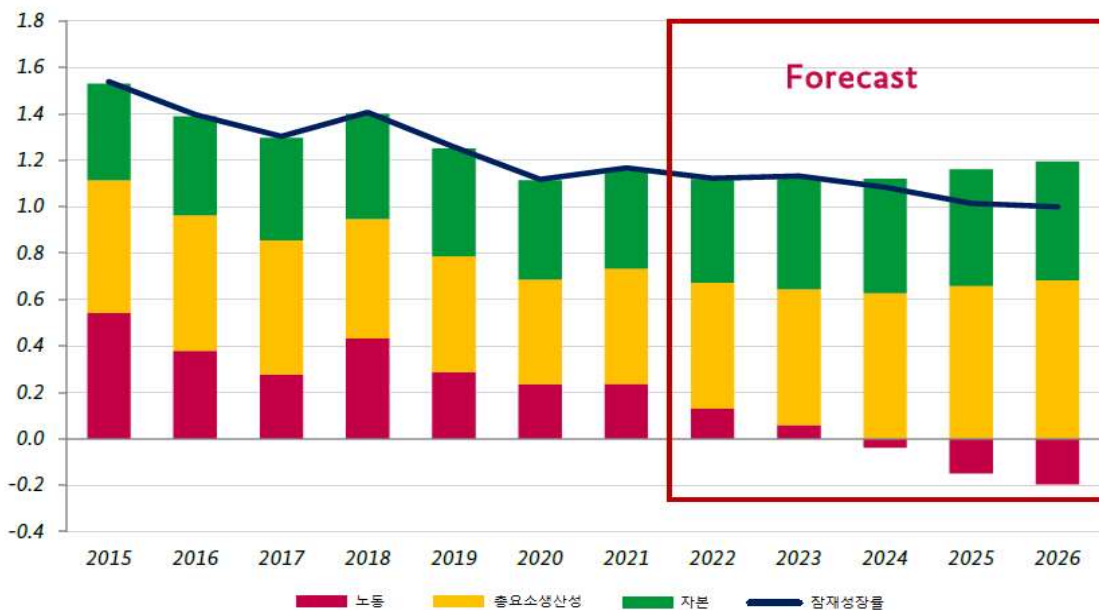
3) 미니잡(minijob): 월 450유로를 받는 저임금, 단기간 일자리로 사회보험 및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면제됨, 미디잡(midijob): 월 450~1300유로를 받는 일자리로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부담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함 (출처: 이승현(2013) “독일 저임금 고용제도의 개정 내용과 전망”, 국제노동브리프, 한국노동연구원, 2013.6. pp.44~55를 참고하여 작성)

- 2022년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연간 10억유로의 정액 기여금 지원 예산이 편성됨
- (국제협력)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 원조를 크게 늘렸으며 2022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ODA 기금을 기부할 예정
- OECD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ODA 지출은 총 284억달러에 달하며 국민총소득의 0.73%에 해당함

5.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전략

- 인구통계학적변화는 공공지출의 증가와 잠재적 생산 증가율에 변화를 가져오고 공공 재정의 견고성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
- 연방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은 2026년까지 1.0%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그림 3] 독일의 잠재 성장률 추이 및 전망(2015~2026)



출처: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, Abbildung 7, p.47, 2022.4.27.

-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을 추구하는 재정 및 경제 정책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지출의 증가와 잠재적 생산량 감소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음
 - 노동력 공급을 촉진하고 노동인구의 잠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증가를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조치가 필요함